

북핵 위기 대응의 '중국역할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대안 모색*

이 동 료**

- I. 문제제기
- II.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국정과제와 대외전략
- III. 시진핑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북핵 정책
- IV. 북핵 대응을 위한 중국 역할과 국제공조의 문제점
- V. 북핵 대응을 위한 복합 국제 공조 모색: 중국역할, 한국역할, 한·미·일 및 한·미·중 협력의 시중주

국문요약

북한의 핵무력이 고도화 될수록 북핵 대응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협력을 유인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고, 국제사회는 북핵 해법을 둘러싼 이견과 대립으로 효율적인 공조를 유지하기 힘든 역설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핵무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급박한 상황 변화 과정에서 중국의 북핵에 대한 인식과 전략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 중국 역할을 견인하여 효과적인 국제공조를 전개시킬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시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국역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단선적인 기존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복합적인 국제공조를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한·미·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최대 압박정책으로 북핵 억지를 모색하는 한편, 한·미·중 대화를 통해 북한체제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해줄 수 있는 최대의 관여방안도 함께 전개되어야 할 이유와 필요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북핵, 중국역할, 국제공조, 쌍중단, 쌍궤병행

* 이 논문은 2015년도 동덕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I. 문제제기

북한이 2017년 9월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이제 북한의 핵무력 보유가 임박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북핵문제는 사실상 한반도를 넘어서 국제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인식하며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 대응해야 하는 절박한 과제가 된 것이다. 그런 까닭에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해 가장 강도 높은 9번째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2017.9.11)를 채택했다.

그런데 제 아무리 강도 높은 유엔 제재 결의안이 채택, 실행된다고 할지라도 지난 8번의 제재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제재의 충분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무력 보유가 거의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스스로도 이미 핵보유국임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제재의 효과 여부는 물론이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쉽사리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국제사회는 국가별 독자제재, 군사옵션 등 다양한 추가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모색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국제사회는 중국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는 지속적으로 중국이 진정성을 갖고 북한 제재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북핵 대응이라고 중국 책임론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을 압박하면 할수록 그리고 독자적인 추가 제재 방안들이 모색되면 될수록 중국의 협조를 얻어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그 결과 북핵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는 오히려 이완되고 심지어 북핵 문제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균열을 이용하여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임박해지면서 국제사회는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갈등에서 이제 북한의 핵무기 보유의 인정 문제라는 새로운 쟁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예컨대 비핵화보다는 우선적으로 핵 동결이라는 보다 현실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하면, 한국 역시 핵무기 보유를 통해 공포의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러

한 논의의 확장이 진행될수록 북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의 길은 더욱 험난해지고 있다.

요컨대 북핵 개발이 진전될수록 북핵 대응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의 협조를 유인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국제사회는 해법을 둘러싼 이견과 대립으로 효율적인 공조를 유지하기 어려운 역설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제는 국제사회가 북핵 대응에 공조해야 하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특히 중국을 국제사회의 공조에 견인할 수 있을지 있다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은 북한의 핵무력이 현실화되고 있는 급박한 상황 변화 과정에서 중국의 북핵에 대한 인식과 전략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 중국 역할을 견인하거나 혹은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적 국제공조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국정과제와 대외전략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국가목표, 대외전략, 한반도 정책의 하위 변수이자 종속변수이므로 유동적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를 이해하고 전망하기 위해서는 기복이 심한 북중관계의 현상에 주목하여 판단하기 보다는 중국의 국가목표와 대외전략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거시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 정부는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한 장기 플랜을 지속적으로 진행시켜 가고자 한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은 시진핑 정부의 국정과제인 동시에 공산당 체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정치 의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이 제시한 부상 일정, 즉 '두 개의 백년' 실현 가능성을 국내외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단 중간단계인 2021년 시진핑 집권이 확정된 시기까지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실제로 2017년 10월 18일 개막한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의 보고에서는 사실상 중국의 강국화 일정을 예정보다 15년 앞당겨 2035년으로 재설정하면서 구체화하였다.¹ 즉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국가 완성과 중화민족의 위대

한 부흥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공산당 체제의 유지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예컨대 “오랜 기간 당의 단결된 지도의 결과 아편 전쟁 이후 구(舊)중국이 겪었던 수모와 비참함을 씻어내고 밝은 미래를 창조해 냈다.”고 언급한 것은 중국이 과거 100년 치욕의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중국 인민들에게는 부강한 중국 국민이 될 수 있다는 기대 심리를 심어주고 이를 통해 공산당 체제 강화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시대’의 과제는 “인민의 보다 나은 생활(美好生活)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발전간의 모순을 해소하여 강국화(強起來)”의 길로 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인민들의 변화된 요구에 부응하는 질적 발전을 통해 명실상부한 강국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다.

시진핑 정부는 집권 2기 향후 5년 기간에 ‘중국의 꿈’ 실현에 대한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느냐 하는 정치적 부담과 과제를 안게 되었다. 특히 마오쩌둥을 비롯하여 역대 지도자는 모두 자신의 사상이나 이론을 사후 또는 퇴임 후 삽입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업적을 평가하는 의미를 가졌다. 반면에 시진핑 주석은 2기 출범과 함께 ‘시진핑 사상’을 조기에 당헌(黨憲)에 삽입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권력이 강화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 향후 5년간 ‘시진핑 사상’의 의미와 성취 여부에 대한 검증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 또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비전을 실현시키기에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다. 대내적으로는 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 속에 확실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빠르게 제고 되고 있으며, 제도화의 역주행으로 당 체제 정비도 새로운 과제가 될 수 있다. 대외적으로도 세계경제 여건은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중국의 강국화 추세에 따라 인접국들의 경계도 고조되고 있고 향후 불가피한 미국과의 세력 경쟁에도 대비해야 한다.

¹ 习近平, “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 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在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2017.10.18.) <<http://politics.people.com.cn/n1/2017/1028/c1001-29613514.html>> (검색일: 2017.11.25.).

요컨대 시진핑 2기는 강력한 권력 기반을 확립하고 장미빛 비전을 제시하며 화려하게 출범한 듯 보이지만 실제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과제는 산적해 있다. 시진핑 2기가 제시하고 있는 강국화 플랜을 실질적으로 진행시켜가고자 한다면 향후 국내 발전과 안정에 보다 집중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²

한편 시 주석이 당 대회 보고에서도 누차에 걸쳐 언급했듯이 '중화민족의 부흥'을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할 정도로 강국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 따라서 시진핑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신고립주의적 경향이 지속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우회하면서 강국화 플랜을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실제로 중국은 대외개방, 국제협력, 국제주의, 그리고 인류에의 공헌을 당 대회 보고에서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과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국의 지혜와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당 대회 직후 토론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인류사회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공헌을 강조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을 통해 개도국의 현대화에 새로운 경로(path)를 제공하고, 인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방안(solution)을 제시하고 더 좋은 사회제도를 모색하는데 있어 중국의 지혜(wisdom)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³ 특히 “중국은 전통대국과는 다른 강국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⁴ 요컨대 중국은 강국화 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우회하면서 점진적으로 미국과 차별적인 강국으로서의 역할과 글로벌 리더십을 확장해가고자 하는 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표출하고 있다.

시진핑 체제는 미국과의 경쟁과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상정해 왔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경쟁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도 판단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우회하면서 장기적

² 이동률, “시진핑 ‘신시대’ 출범과 정치외교적 함의,” 『EAI 논평』, (동아시아연구원, 2017.11.01.), p. 2.

³ “王毅谈新时代中国外交的新贡献、新作为,” (2017.10.19.) <<http://www.fmprc.gov.cn/web/zyxw/t1503118.shtml>> (검색일: 2017.11.20.).

⁴ “王毅谈新时代中国特色大国外交总目标：推动构建人类命运共同体,” (2017.10.19.) <<http://www.fmprc.gov.cn/web/zyxw/t1503111.shtml>> (검색일: 2017.11.20.).

부상 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요컨대 시진핑 정부의 ‘중국식 대국 외교’는 중국의 부상이 결코 강대국간 충돌의 비극이라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Thucydides trap)’에 빠지지 않을 것임을 설득하여 중국 부상에 유리한 상황과 조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⁵

특히 미국과의 협력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 역설하고 있다. 시진핑과 왕이의 최근 연설에서는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불충돌, 불대항, 상호 존중, 협력공영(不冲突 不对抗, 相互尊重, 合作共赢)을 강조하고 있다.⁶ 아울러 왕이는 양회(兩會)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중미관계가 “구시대의 관념을 넘어서 새로운 시야를 개척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성숙한 불혹의 시대로 진입하기를 희망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⁷

중국은 트럼프발 불확실성을 관리하면서 중국 부상 일정은 진행시켜 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은 최근 ‘일대일로(一帶一路)’ 붐을 재점화 시키면서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 적극적인 경제외교 공세를 펼치고 있다.⁸ 시진핑 주석은 2016년 12월 13일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인도 3개국 순방에 나서면서 ‘일대일로’ 추진 의사를 재차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중국에게 3국은 모두 일대일로의 주요 연선(沿線)국가들이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주변 국가들이다. 그리고 중국은 2017년 5월에는 29개국 정상을 비롯하여 130여개 국가를 초청하여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였다. 19차 공산당 대회에서는 당헌(黨憲)을 개정하는 과정에 이례적으로 ‘일대일로’를 포함시켰다. 이는 일대일로를 단순 정책 수준을 넘어서 장기적 전략과제로 상정하고 있음을

⁵ 시진핑 주석은 2015년 9월 미국 방문시 시애틀에서의 연설을 통해 중국의 부상이 결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习近平在华盛顿州当地政府和美国友好团体联合欢迎宴会上的演讲,” (2015.09.23.) <http://www.fmprc.gov.cn/web/ziliao_674904/zyjh_674906/t1299508.shtml> (검색일: 2017.06.12.).

⁶ “习近平主席在世界经济论坛2017年年会开幕式上的主旨演讲 (全文),” (2017.01.18.) <http://www.fmprc.gov.cn/web/ziliao_674904/zt_674979/dnzt_674981/xzxzt/xjpdrrsjxgsfw_688636/zxxx_688638/t1431319.shtml> (검색일: 2017.03.20.); 王毅, “坚持合作理念, 作出正确抉择—在第53届慕尼黑安全会议上的演讲,” (2017.02.18.) <<http://www.fmprc.gov.cn/web/zyxw/t1439589.shtml>> (검색일: 2017.04.30.).

⁷ “外交部长王毅就中国外交政策和对外关系回答中外记者提问,” (2017.03.08.) <<http://www.fmprc.gov.cn/web/zyxw/t1444203.shtml>> (검색일: 2017.03.30.).

⁸ 팡아이칭(房愛卿)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일대일로는 중국 경제외교와 대외개방에 있어 최고 수준의 전략으로 전세계와 발전협력을 촉진하는 중국식 방안”이라고 했다. 이는 일대일로가 이제 전략 수준을 넘어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국방안(全球治理的中国方案)’ 일환으로 까지 그 위상을 격상시켜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의미하는 것이다. 즉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우회하면서 자신의 부흥을 위한 발전의 길(中國道路)을 지속시키는 지경제학적 장기전략으로 '일대일로'를 상정하고 추진하려는 것이다.

III. 시진핑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북핵 정책

1. 중국의 한반도 정책 기초

중국은 사실 한국과의 수교 이후에도 남북한 사이에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책기조를 지속해왔다. 이를 통해 중국은 한반도에서 남북한과 동시에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강국으로서의 유리한 입지를 유지, 확대하고자 했다. 그런데 시진핑 정부는 이례적으로 집권 초기에 우선적으로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한반도 정책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취임 이후 아직 북한과는 정상회담을 가지지 않은 반면에 한국과는 7월 G20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이미 8회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탄도탄 발사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또한 사드 배치 등 미일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어 중국이 추구하는 한반도의 안정유지와 영향력 확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남북한 모두에 채널과 지렛대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강대국으로서의 유리한 전략적 위상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추구하는 한반도의 안정유지와 영향력 확보라는 외교 목표가 사실상 모두 도전받고 있으며 시진핑의 한반도 정책 실패로 비쳐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안정을 확보하고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해야 할 외교적 과제를 안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남북한 간 긴장을 완화하고 일정한 관계 개선이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으며, 신베를린 선언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남북한 모두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 유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북한 사이에서 양자택일의 선택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런데 현재 중국은 한국과는 사드 배치 문제로, 북한과는 핵무기 개발 문제로 관계 개선의 장애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사드 배치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한 방어적 차원의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은 사드 배치가 더 직접적으로 안보와 전략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7월 28일 북한의 화성-14 발사와 직후 한국정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결정이 급박하게 진행된 상황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방식이 바로 이러한 인식의 단면을 반증해주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보와 전략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명시하는 반면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이며 따라서 북한뿐만 아니라 관련 당사국들도 자제해야 한다는 논평을 하고 있다.⁹ 즉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주변정세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관련 당사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사드는 중국의 직접적인 안보위협을 초래하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국내정치와 미중관계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이다. 시진핑 정부는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불확실성 요인까지 겹쳐져 안정적인 주변 정세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현재와 같은 국면, 즉 미중관계의 불확실성, 갈등 발생 가능성,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 사드배치와 한중관계의 경색 그리고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고조 등 상황에서는 중국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니고 있는 지정학적 가치를 경시할 수 없다.

2.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북중관계의 변화

북중 정상회담은 2011년 이후 이미 6년째 개최되고 있지 않다. 북중관계의 특수성이 상호방문을 통한 연례적 정상회담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때 장기간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지 않는 것은 북중관계 역사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다.

⁹ “外交部发言人耿爽就韩方宣称将立即同美方协商部署剩余四架“萨德”系统导弹发射车事答记者问”，(2017.07.29) <http://www.fmprc.gov.cn/web/fyrbt_673021/t1481066.shtml> (검색일: 2017.07.30.).

1960년 중반 문혁기 6년간과 1992년 한중 수교이후 7년간 양국 간 정상회담이 단절된 이래 가장 오랜 기간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요컨대 시진핑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강한 의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런데 북한은 시진핑 집권 초기부터 중국의 주요 정치일정 때 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한 도발을 강행하여 한반도의 불안정을 고조시키면서 중국을 당혹케 했다. 예컨대 시진핑은 2012년 11월 15일 중국 공산당 18기 1중전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총서기로 선출된 이후 11월 30일 리젠궈(李建國) 당 정치국위원 겸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특사로 평양에 파견했다. 리젠궈는 북한에게 원조 제의를 하면서 핵과 미사일 실험 자제를 요청하는 시진핑의 친서를 김정은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김정은은 이를 무시하고 그해 12월 12일 미사일을 발사했다.¹⁰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은 주권국가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2013년 2월, 시진핑의 국가주석 취임을 한 달 앞두고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은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후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또한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미국,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 갔다.¹¹

특히 북한의 6차 핵실험은 9월 3일부터 2박 3일간 샤먼(廈門)에서 열리는 '제9차 브릭스(BRICS) 정상회의'의 개막 당일 이뤄졌다. 중국은 시진핑이 주재하는 브릭스 정상회의 당일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고 북한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갖게 되었다.¹² 시진핑 주석은 곧바로 브릭스 회의에 참석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을 모색했다. 아울러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의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에 찬성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재의 강도를 높여갔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신속히 동의하여 결의안 2375호는 9일이라는 역대 최단기에 채택되었다. 뿐만

¹⁰ “[北 장거리로켓 발사 예고] 중국, 특사 보내 말렸지만 효과없어,” 『한국일보』, 2012.12.03.

¹¹ 이동률, “2016년 한중관계의 현황, 평가, 전망,”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 편, 『2016 중국 정세보고』, (서울: 국립외교원, 2017), pp. 215~218.

¹² KIEP 북경사무소,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 내 평가,” 『이슈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 2017.09.02.), pp. 2~3.

아니라 중국은 섬유수출 금지, 북한과의 합작사업 금지, 그리고 최초로 대북 유류 공급 제한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제재 내용을 포함하는데도 동의했다.

북한은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대해 2014년부터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공개적 비난을 시작했다. 즉 2014년 7월 노동신문은 ‘일부 쫓대 없는 나라들’ 그리고 ‘세계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데 앞장서야 할 나라들도 자국의 이해관계만을 우선시하고 묵인하는 태도’ 등의 표현을 통해 간접적이지만 사실상 중국이 미국의 대북 압박을 묵인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¹³

중국이 2017년 2월 북한산 석탄수입 전면 중단 결정을 발표한 이후 2월과 4월에 북한 노동신문의 논평을 통해 중국의 대북 경제 제재를 비난했지만 역시 우회적인 방식이었다. 즉 “대국을 자처하며 쫓대 없이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춘다.”고 논평했다.¹⁴ 그리고 7월 21일자 논평에서는 대북제재를 비난했지만 ‘남의 손으로 불덩이를 쥐게 하는 파렴치한 술책은 통할 수 없다’라고 하여 중국을 직접 겨냥하기 보다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것에 대한 비난 공세를 펼쳤다.¹⁵ 즉 노동신문은 “미국이 중국을 내세워 압박한다고 해서 조중 두나라 인민이 피로써 맺은 우의와 친선의 전통을 절대로 깨뜨릴 수 없다”고 하여 미국을 비난하면서 다른 한편 중국과의 전통우의를 강조하여 중국에게 제재에 동참하지 말 것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런데 2017년 9월 22일에는 인민일보(人民日報)와 환구시보(環球時報)를 직접 거명해서 “파렴치한 언론의 칠칠치 못함”이라는 제목 하에 “미국의 트럼프 정권에 추종하고 있다”고 중국을 향해 직접 공세를 펼쳤다.¹⁶ 언론에 대한 공세이기는 하지만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를 공식 거명하며 비판한 것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체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을 직접 지칭하지 않는 간접적인 비난 방식에서 직접 중국을 거명하며 직설적 화법으로 비난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북한의 중국에 대한 반감 정도를 가늠하게 한다. 북한이 중국의 예상보다 더 강도 높게 중국에 반발하고 있고, 고위급 접촉도

¹³ “北 노동신문, 또 중국 비난…“미국 횡포 묵인”, 『연합뉴스』, 2014.07.24.

¹⁴ “저절한 처사, 유치한 셈법,” 『조선중앙통신』, 2017.02.23; 『통일부 일일·주간 북한동향』, <<http://nkinfo.unikorea.go.kr>> (검색일: 2017.05.25.).

¹⁵ “北, 中 압박하는 美 비난…북중 친선 깨트릴 수 없다,” 『연합뉴스』, 2017.07.21.

¹⁶ “北매체, 中언론 실명 거론하며 “내정간섭” 이례적 비난,” 『연합뉴스』, 2017.09.22

거부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이 정상회담과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을 6자회담 등 대화 참여를 유도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해왔던 전통적인 '북한관리' 방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9차 공산당 대회 이후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시진핑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사례는 북중관계의 미묘한 현주소를 반영해주고 있다. 쑹타오가 시진핑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음에도 예상 밖에 김정은과의 면담이 있었다는 발표가 없다.¹⁷ 2007년 제17차 당 대회 때의 류윈산(劉雲山) 당 정치국위원 겸 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 2012년 제18차 당대회 때의 리젠궈 부위원장을 특사로 파견하여 각각 김정일,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던 전례와 비교하면 북중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전과 비교할 때 직급이 낮은 중앙위원급 인사를 특사로 보낸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식에서도 변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당 대회 이후 관례대로 특사를 파견했고, 쑹부장과 북한 2인자인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면담이 있었다는 것은 북중 양측이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관계는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북한의 거센 비난공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공식적인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과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도 역시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관리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 개최를 열렬히 축하한다는 축전을 보냈고,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 명의로 다시 시 주석의 총서기 취임을 축하하는 축전도 보냈다.

3. 중국의 북한 및 북핵 정책

중국은 이미 북핵과 북한 문제를 분리해서 인식하고 대응해오고 있다. 중국은 북핵문제를 한반도 비핵화라는 틀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장기적 전략과제로 상정하고 있다. 북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이므로 비핵화를

¹⁷ “북특사 쑹타오, 김정은 면담 불발 가능성…北보도 없어,” 『연합뉴스』, 2017.11.20.

실현하는데 있어 중국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북한의 핵개발이 중국의 부상 플랜에 미칠 수 있는 안보 딜레마를 최소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미국과의 갈등도 최소화하기 위해 비핵화라는 기본 방향에서는 미국과의 협조를 유지하고자 한다. 반면에 비핵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일정한 관계 경색은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북한 체제의 위기와 같은 또 다른 안보 우려를 야기하지 않도록 북한에 대한 채널과 레버리지를 유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국의 북핵정책은 중국의 부상 전략과 미중관계에 영향을 받아 유동성을 보일 수 있지만 북중관계와 한중관계의 변화에 연동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즉 북중관계가 악화되거나 한중관계가 개선된다고 해서 중국의 북핵 정책에 주목할 만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 핵이 고도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타협이나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핵 폐기를 위해 북한체제 붕괴까지도 상정하는 압박 수단을 동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결연히 반대 한다’고 하고 비핵화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북한의 중국에 대한 비난 공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에 대해 중국정부 차원에서의 공개적 맞대응은 여전히 자제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북중관계가 전면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시진핑 2기는 강국화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중국 부상의 전략적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따라서 북한의 연이은 핵 및 미사일 도발과 김정남 피살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북중관계가 냉각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문제의 관리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중관계, 한중관계 모두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요인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도 ‘북한발’ 안보 불안을 관리하면서 북한이라는 전략적 카드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즉 역내에서 미국과의 ‘편가르기식 영향력 경쟁’이 재연될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대북제재에 참여는 하겠지만 그로 인해 김정은 체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북한과의 관계가 더 냉각되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이 소멸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¹⁸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반도의 안정’ 확보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중국은 비핵화를 주장하는 한편, 동시에 관련 당사국, 즉 사실상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를 자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한중 정상은 사드 갈등을 봉합한 이후 첫 정상 회담을 갖고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북한 핵 및 미사일과 관련해 현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발표하여 초미의 안보 위협인 북핵문제에 대해 해법 모색보다는 관리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¹⁹ 즉 중국은 북한의 체제 위기로 인해 야기되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도 북핵 못지않은 도전과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2017년 3월 양회(兩會)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대화를 통한 해결 방식으로 궤도를 전환하는 역할(扳道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재차 제재의 목적이 대화 복귀에 있음을 강조하였다.²⁰ 중국이 북핵 제재의 목적은 대화 재개에 있다는 점을 역설하는 이면에는 한국과 미국의 제재 목적이 자국과는 상이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한국과 미국은 북핵 폐기를 위한 제재과정을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교체도 불사할 수 있다고 중국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이러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한 원유 차단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전격적인 대북제재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를 요청할 때 마다 중국은 일관되게 북한 도발의 책임이 미국과 한국에도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왕이는 양회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주요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다.”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심지어 추이

¹⁸ 이동률, “북핵문제 대응: ‘중국역할’의 재검토, ‘한국역할’의 모색,” 『csf 전문가 칼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11.08.) <<http://csf.kiep.go.kr/expertColr/M004030000/view.do?articleId=20422>> (검색일: 2017.8.20.).

¹⁹ 한중정상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习近平会见韩国总统文在寅,” (2017.11.11.) <<http://www.fmprc.gov.cn/web/zyxw/t1509731.shtml>> (검색일: 2017.11.11.).

²⁰ “王毅: 中国愿做朝核问题“扳道工”, 『中国网』, 2017.03.08. <http://www.china.com.cn/lianghui/news/2017-03/08/content_40428143.htm> (검색일: 2017.7.20.).

텐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더 노골적으로 미국 책임론으로 중국책임론을 반박하고 있다. 즉 “미국은 북핵문제를 중국에게만 맡겨 놓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미국은 중국을 탓하지 말고 북한과 직접 대화하라”고 반박하고 있다.²¹

중국은 여전히 기존의 3원칙, 즉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 협상을 통한 해결 원칙을 견지하면서 구체적인 북핵 해법으로 이른바 쌍잠정(雙暫停: 북핵, 미사일도발과 한미연합훈련 동시 잠정 중단)과 쌍궤병행(雙軌並行: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역시 당장의 북핵 위기를 해결하려는 절박함으로 제기 되었다기 보다는 일단 쌍중단을 통해 상황 악화를 막고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핵 위기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더 강해 보인다. 왜냐하면 쌍궤병행을 위한 대화가 착수되려면 보다 구체적인 진행 절차와 방법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력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은 변함없이 일관되게 선언적 제안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중국의 제안에 대해서는 실제 북한 뿐 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어느 쪽으로 부터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북핵에 대한 인식과 대응 전략은 지난 두 차례의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우선 4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북핵에 대한 강경 입장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은 북핵과 사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즉 쌍궤병행과 쌍잠정을 해법으로 재차 제기하였고, 대화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는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만을 간략하게 밝혔다. 이 과정에서 왕이 부장은 중국이 ‘소개’하고 ‘제안’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중국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중국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야기하는 안보불안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중국의 인식 변화가 실제로 정책 변화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은 정상회담 직후 중국의 행보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칼빈슨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이동시키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반면

²¹ 박형기, “중국, 미국의 대북 석유금수 요구 거절,” 『뉴스1』, 2017.09.17.: “China rejects US demand to cut oil exports to North Korea,” *South China Morning Post*, September 16, 2017.

에 중국은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특별사무대표를 한국에 파견하여 북핵과 사드문제에 대해 병행 논의하면서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관리하려는 행보를 했다. ‘성과가 있었다.’는 정상회담 직후, 오히려 여러 상황이 새롭게 전개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도발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함께 했지만 대응방법에 대한 이견도 재확인한 것이다. 그 결과 양국은 회담이후 각자의 방식대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시도를 전개하면서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한 것이다.

중국은 11월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핵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11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은 이른바 ‘말 폭탄’이라 할 정도로 거친 설전을 주고받으며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이러한 위기국면에서 중국에서 개최된 미중정상회담인 만큼 고조된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는 핵심의제가 아니었으며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하였다.²²

오히려 주목되는 것은 중국이 그동안 북핵 해법으로 일관되게 제시해온 ‘쌍중단, 쌍궤병행’ 안은 이번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이 언급을 안한 것 인지 아니면 논의는 했으나 의견 불일치로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렇지만 어느 경우이든 중국 제안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는 징후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 외에는 기대를 모았던 진일보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안을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집행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어 더 강력한 독자 제재를 중국에게 압박해온 미국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²³

²² 미중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내용 “习近平同美国总统特朗普共同会见记者,” (2017.11.09.) <<http://www.fmprc.gov.cn/web/zyxw/t1509170.shtml>> (검색일: 2017.11.11.).

²³ “中美元首会晤达成多方面重要共识- 同意共同努力推动两国关系取得更大发展,” (2017.11.09.) <<http://www.fmprc.gov.cn/web/zyxw/t1509111.shtml>> (검색일: 2017.11.11.).

IV. 북핵 대응을 위한 중국 역할과 국제공조의 문제점

1. 북핵 대응의 중국 역할과 한중 협력의 문제점

한중 수교이후 지난 25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한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역할에 대한 기대를 배경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을 시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는 비핵화라는 목표에 근접하기 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고도화되었다. 한중 간의 북핵 대응 공조는 효과적이지 못했고, ‘중국역할’에 대한 기대 역시 실현되지 못했다.

북핵 대응에 있어서의 ‘중국역할론’이 본격적으로 검증대에 올라서게 된 것은 2016년 1월 예상치 못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였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직전까지 한중관계는 이른바 수교 이래 ‘최상의 관계’임을 과시해왔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역할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이른바 ‘중국경사론’에 대한 부담을 안으면서 까지도 중국의 전승절 행사 참석 등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²⁴ 박 대통령은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가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다른 어느 때 보다도 한반도의 통일에 역점을 두고 자세히 설명하고 설득했다고 한다. 그리고 정상회담직후 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한중간에 다양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수형기자단에게 설명하여 중국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다.²⁵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전까지는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에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²⁶ 따라서 북핵 해결과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의 ‘중국 역할’에 대해 기대하고, 이에 따라 적극적인 대중국 외교공세를 펼쳤고 상당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박 정부가 이러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북핵 4차 실험 직후 이례적으로 곧바로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를 시도했던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전화통화는 한 달 이후에야 비로소 성사되었고 박 정부가 기대했던 북한 압박에도 중국은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기존의 북핵 3원칙을 고수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중국의 기대 밖의 태도에 당황했고, 중국 역할을 압박하기 위해

²⁴ 이동률, “2016년 한중관계의 현황, 평가, 전망,” pp. 215~220.

²⁵ “朴대통령 “中과 조속한 시일내 ‘평화통일’ 다양한 논의 시작”, 『연합뉴스』, 2015.09.04.

²⁶ “황준국, 북중관계 질적 변화: ‘北도발’ 편들지 않을 것”, 『연합뉴스』, 2015.08.28.

이전과 다른 강경한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고 언급하여 사실상 전승철 참석에 대한 중국의 보답으로 북핵 대응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다.²⁷ 아울러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하였고 이어서 “지금 전술핵을 우리도 가져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오죽하면 그런 주장을 하겠느냐”고도 하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핵문제 논의를 위한 5자회담을 제안하여 그동안 정상 회담에서 지속적으로 동의해왔던 중국이 주장해온 북핵 6자회담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비쳐지기도 했다. 정부는 초기의 ‘중국역할론’에 대한 기대가 중국에 대한 실망을 거쳐 ‘중국책임론’으로 옮겨가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중국은 이러한 한국정부의 일련의 흐름을 대북한 정책이 압박 기조로 회귀한 것으로 해석했으며 ‘중국 책임론’을 통해 중국마저 압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민감하게 대응했다.

중국은 북한의 돌연한 4차 핵실험에 대해 비판하고 유엔 제재 결의안 채택에 합의하면서도 중국 책임론 제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은 오히려 북핵 실험을 계기로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출하였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대북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반도 핵문제는 중국으로 인해 야기된 것도 아니며 중국이 해결의 열쇠를 지고 있지도 않다”고 한국과 미국의 ‘중국 책임론’ 제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²⁸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 북핵문제 해결에서의 중국역할론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되었다. 기대하는 중국의 구체적인 역할, 중국역할을 이끌어 내는 방법, 그리고 역할론을 넘어서는 중국 책임론에 대해 상이한 입장들 사이에 논쟁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중국책임론에 입각해서 중국이 대북한 압박을 강화하기를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²⁹ 반면에 중국을 밀어내는 ‘중국역할론’이 되어서는

²⁷ “박 대통령 “北核, 중국의 역할 중요. 어렵고 힘들 때 손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 『조선일보』, 2016.01.13.

²⁸ “2016年1月8日外交部发言人华春莹主持例行记者会,” <http://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l_673025/t1330394.shtml> (검색일:2017.10.20.).

²⁹ “중국이 달라져야 한다.” 『중앙일보』, 2016.01.09.

안 된다는 반론도 등장했다.³⁰ 즉 현 시점에서 중국의 중재 역할이 중요함에도 미국과 한국이 대북 압박 강화와 중국 역할론 만을 얘기한 결과 중국이 중재 노력을 펼 여지는 더 좁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차원에서 ‘중국역할 무용론’도 등장하였다. 즉 중국은 북핵 해결의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판단 하에 중국에 역할을 기대하기 보다는 미일과의 협력을 강화해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반면에 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을 넘어서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중국역할론을 대체하는 일종의 ‘한국역할론’도 등장하였다.

이처럼 중국역할론과 중국책임론 사이에서 혼선을 야기하게 된 데는 구조적인 배경이 있다. 2008년 이후 중국의 가파른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으로 인해 역내에서의 미중 간의 경쟁이 고조되는 등 국제환경과 구조에 변화가 발생하면서 북핵문제는 한중 양자차원의 협력을 통해서 해법을 찾기 어려운 과제로 변화되었다. 즉 한중관계가 2015년 ‘최상의 관계’라고 해서 중국의 대북 정책, 북핵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구조적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중국의 가파른 부상과 그로 인해 미국과 북한 경쟁관계에 진입하면서 북핵 정책은 중국의 대미외교와 미중관계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가 되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미중관계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중국의 북핵 정책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임박했음에도 중국의 공식 반응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다. 중국은 북핵에 반대하고 비핵화에 대한 입장도 확고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강조하여 제재에 대한 의지도 강도 높게 표명 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쌍중단, 쌍궤병행론과 6자회담을 해법으로 제시하여 제재보다는 대화가 해결책이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에게 한반도는 현상유지를 통한 안정 유지의 대상인 동시에 부상 실현과정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영향력 확보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도 이러한 기본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³⁰ “중국 밀어내는 ‘중국역할론’으로 안 된다,” 『한겨레』, 2016.01.11.

시진핑 2기 정부는 내부적으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강국화 로드맵을 진행시켜 가고자 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저비용의 안정적인 주변 환경 유지가 매우 중요한 우선 외교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장기적 과제로 판단하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보다는 우선적으로 '북한발' 안보 불안을 조속히 진정시키고 최소화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책임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에 참여하고 그 강도도 상황에 따라 높여 갈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미국 트럼프발 불확실성과 불가측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소진해버리는 상황은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

중국역할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재검토 논의가 중국역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즉 중국이 우리가 기대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것과 실제 역할 능력의 존재 여부는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을 경유하는 북핵 대응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뚜렷한 방법이 사실상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중국역할 부정론은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 강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대북 압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한·미·일 3국 공조만으로는 북핵 해결은 물론이고 북한 제재의 효과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해왔다.

실제로 중국 역할에 대한 재검토 논의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에서의 '중국역할'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북한에 대한 수단을 많이 보유한 국가가 중국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예컨대 6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 북한 원유공급 차단이 가장 실효성 있는 마지막 제재 수단으로 떠올랐다. 즉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원유 공급을 차단한다면 그 어떤 유엔 제재안보다도 효과가 클 것이라는 희망적 기대가 있다는 것을 결국 중국역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역할에 과잉 기대한 것도 분명 문제이다. 그렇지만 현재 한중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한·미·일 협력에 과도하게 집중할 경우, 결국 중국 역할을 견인할 수 있는 공간은 더욱 좁아지게 되고 그 결과 북한

이 오히려 최대 수혜자가 되는 역설적 상황이 전개될 우려가 있다. 북한은 한·미·일과 중국사이의 전략적 간극을 이용하여 핵무기 고도화를 위한 시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도발이 이러한 간극을 확대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그 범주에서 중국역할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역할’에 대한 한국의 기대와 요구가 충분히 전략적이고 적합한 것이었는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기대한 중국역할’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은 한국이 기대하는 것, 중국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중국이 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구분해내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충분치 않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중국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읽어 내고 그 범위에서 우리의 기대와 요구를 재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최대치의 중국역할을 견인해내고자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 북핵 대응의 국제 공조의 한계

중국은 북핵 해법의 하나로 국제공조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중국은 북핵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자회담에 이어서 6자회담을 발의하고 주재해왔다. 그리고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안에도 전향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옮겨오고 있다. 실제로 중국이 주장하는 6자회담 방안은 사실상 이미 사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중국의 제안을 무조건 무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실제로 중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국제공조의 현실적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국은 미국, 러시아, 일본 등 동아시아 4대 강국과 함께 북한 핵무기 개발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남북한을 제외하고 사실상 6자회담의 주요 당사국이기도 한 이들 국가들이 비핵화 원칙에는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은 역지되기 보다는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비록 유엔 안보리에서의 제재 결의안 채택은 신속하게 합의에 도달하며 공조를 과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결의안 채택은 이미 9회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뚜렷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합의 당사국들 사이에서도 내부적으로는 결의안의 효용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유엔 결의안 채택이후에 곧바로 미국이 독자제재안, 심지어 군사옵션을 들고 나오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보유가 이제는 사실상 현실화된 만큼 기존과는 다른 대응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의 와중에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중국은 북핵 대응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자국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북핵문제는 압박과 제재보다는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고, 특히 북미 간의 문제이므로 이들 양자 간 협상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러시아와의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군사옵션까지 거론하는 등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주장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문제에서 중국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요구하고, 압박도 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의회에서 북한이 사린가스를 탄도미사일 탄두에 장착해서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등 한반도 불안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북핵 위협에 직면하여 한편으로는 정권 위기를 돌파하는 방편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는 동시에 한반도 유사시 미일 동맹에 기반한 일본 역할 강화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아베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동맹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 위협에 공동 대응이라는 이유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의 중국 경사를 경계하려는 전략적 고려도 있다.

이에 따라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는 결과적으로 중국을 자극하게 되고 중국은 다시 러시아와의 공조를 강화해가는 작용과 반작용의 동학이 전개되고 있다. 요컨대 북핵문제가 역내 안보 이슈를 압도하게 되면서 동아시아 지역 질서는 북·중·러 대 한·미·일이라는 구도가 조성되는 미묘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대립 구도는 더욱 분명해

지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제어하는데 일치된 대응을 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북핵 억지를 위해 한국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대미 견제를 위한 전략적 제휴가 강화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내 사드 배치 문제를 단순히 한국의 북핵 대응책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미사일방어(Missile Defense: MD)체제의 전 세계적 확산의 일환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응해 공동으로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상하이협력기구(SCO) 국가들까지 안보협력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사드 배치는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양상을 초래하고 있다.

북핵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어렵게 하는 이러한 대립 구도는 북핵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초래되고 있다. 제재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을 자국의 직접적인 초미의 안보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북핵을 당면한 최대 안보 위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북핵문제를 그 실체 자체로 보기보다는 그 문제로 파생될 전략적 손익에 대한 고려와 판단 때문이다.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인식해온 중국에게 이러한 경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 일본, 러시아 역시 북핵문제를 일정정도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공조체제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북핵 위협을 역설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정부조차 진정으로 북핵문제를 최대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며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북핵 이슈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결과를 복기해보면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의외로 중국에게 북핵에 대한 역할이나 책임을 압박하는 대신에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2,535억 달러의 비즈니스 계약과 투자협정 체결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받은 것을 정상회담의 주된 성과로 평가하는 분위기였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카드로 안보 장사를 한 것이고 중국은 경제 선물로 부담스러운 북핵 압박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평가마저 제기되고

있다.³¹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방문에서도 첨단 무기 구매를 성사시킨 반면에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상 밖에 한국과의 공조를 과시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처럼 트럼프 정부의 북핵 정책에 대한 진의에 의문이 제기된다면 중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미국이 주도하는 북핵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게 될 개연성이 있다.

V. 북핵 대응을 위한 복합 국제 공조 모색: 중국역할, 한국역할, 한·미·일 및 한·미·중 협력의 사중주

1. 한중 협력에 기반한 한국역할의 강화

북핵문제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한 현실적 위협임을 감안할 때, 한·미·일 협력과 함께 중국과의 공조 역시 중요할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의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한국과 중국 양국은 동아시아의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북핵문제가 초미의 현실적 위협이자 도전임을 재각성하고 미중의 동아시아에서의 복잡한 경쟁 구도가 북핵 이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최우선 협력 의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한중 양국에게 북핵문제가 바로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최우선 '구동(求同)의 이슈'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중 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비핵화'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중국 역시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구체적인 해법에서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의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원론적 차원에서라도 비핵화 과정은 물론이고 미래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양국이 논의를 진행해 갈 수 있는 환경과 기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양국이 비핵화라는 원론에 동의하면서도 정작 해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미래 한반도 지형에 대한 전략적 불신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핵화가 초미의 과제이기는 하지만 결국 장기적 전략 이슈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일보의 진전도 어려운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³¹ “시진핑, 트럼프에 280조원 구매·투자·합작 ‘선물보따리,’” 『국민일보』, 2017.11.0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890498&code=61131111&cp=du>> (검색일: 2017.11.15.).

아울러 중국이 올해 3월 이래 북핵 위기의 해결 방안으로 쌍잠정과 쌍궤병행을 제시하였지만 이미 북한의 핵개발은 고도화 되었고, 북한과 미국이 대립이 격화되는 등 상황이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는 만큼 변화된 정세에 맞는 새로운 진전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해법이 일관성이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사국들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방안만을 고수하는 것은 자칫 외교적 수사로 비쳐지면서 방안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초래할 수 있다.

북핵문제는 여전히 미중의 지정학 경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점차 더욱 중요해져야 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보다 주도적 입장에서 북핵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이러한 한국의 시도에 대해 중국이 지지하고 전향적으로 협조해주는 방식으로 중국역할이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중국 역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모두 현실적으로 북핵 해법으로서의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역할이 보완되어 중국역할, 한·미·일 안보협력이 상황별, 시기별로 적합하게 조합하여 동원되는 복합 전략이 필요하다.

2.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미·중 대화의 병행

북한이 도발하면 중국 역할론이 제기되고 기대했던 역할이 견인되지 않으면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카드가 등장했다. 그리고 다시 ‘중국 뒷문’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게 미국, 일본 정상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한·미·일 3각 공조 의지를 분명하게 과시했다. 4차 핵실험 직후 중국과의 협력에 방점을 두었던 대응방식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한·미·일 협력 강화는 결과적으로 중국에게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인식케 하여 대북제재에 적극적이지 않게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중국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공조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앞서 언급한대로 한국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과 병행하여 한·미·중 대화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가 유기적으로 결합되

어 질서 있게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압박을 주장하는 국가와 대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 균열이 있어 이러한 질서 있는 압박과 관여가 병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균열의 배경은 좁게는 한반도의 미래 지형에 대한 불신과 전략적 선택의 차이에 있으며, 보다 넓게는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 구축을 둘러싼 경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균열을 좁힐 수 있는 가장 명료한 방법은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신뢰를 회복하거나 또는 대타협을 이루어내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두 가지 방안 모두 쉽지 않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초미의 현실적 위협으로 대두된 북핵문제 관한 한 한국이 중간 매개가 되어 미국과 중국의 균열을 좁히기 위한 대화 노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최대한 인식시키기 위한 제재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 제재의 중심에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주요 기반이 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고도화할수록 그에 상응하여 한·미·일 안보 협력은 강화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제재는 비핵화의 필요충분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한·미·일 중심의 최대한 제재와 병행하여 한·미·중 간의 대화를 통해 효율적인 관여의 방법도 구상되어야 한다. 즉 한·미·중 대화는 제재에 직면해 있는 북한에게 비핵화를 통해 안보와 번영을 얻을 수 있다는 신뢰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요컨대 한·미·중 3국이 북한에게 일관된 동일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최선의 북핵 해법인 만큼,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미·중 3국이 북핵 해결의 모든 가능한 방법을 열어 놓고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낮은 단계에서부터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한·미·중 대화에서 출발하여 한·중·러, 한·중·일, 그리고 미중 남북한 등 다양한 소다자 대화로 확장해 간다면 동북아에 한·미·일 대 북·중·러 라는 '냉전의 귀환'을 방지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상을 구체화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 제출: 10월 30일 ■ 심사: 11월 14일 ■ 채택: 11월 24일

참고문헌

1. 논문

- 이동률. “2016년 한중관계의 현황, 평가, 전망.”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 편. 『2016 중국정세보고』. 서울: 국립외교원, 2017.
- _____. “북핵문제 대응: ‘중국역할’의 재검토, ‘한국역할’의 모색.” 『csf 전문가 칼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11.08.
- _____. “시진핑 ‘신시대’ 출범과 정치외교적 함의.” 『EAI 논평』. 2017.11.01.
- KIEP 북경사무소.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 내 평가.” 『이슈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09.02.

2. 기타

- 『국민일보』.
- 『뉴스1』.
- 『연합뉴스』.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한겨레』.
- 『한국일보』.

『조선중앙통신』.

- 『人民网』 <<http://people.com.cn>>.
- 『中国网』 <<http://www.china.com.cn>>.
- 中国 外交部 <<http://www.fmprc.gov.cn>>.
- South China Morning Post*.

- 통일부 일일·주간 북한동향 <<http://nkinfo.unikorea.go.kr>>.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

Abstract

Critical evaluation and alternative seeking of the role of China in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Lee, Dong Ryul

As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progresses, it becomes more difficult to attract cooperation with China, which has a key role in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facing a paradox that it is difficult to maintain efficient cooperation in the face of disagreements over the solution. And this situation is what North Korea wa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lucidate the ways in whic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draw up effective cooperation based on the necessity to cooperate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at measures can be taken to promote China's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is article, I will examine how North Korea has changed its perceptions and strategie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the course of the imminent change in the status of nuclear armed forces, and by looking for ways to lead China's role and develop effe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Key Words: China's role, North Korea nuclear, International Cooperation, Dual suspension, dual freeze

